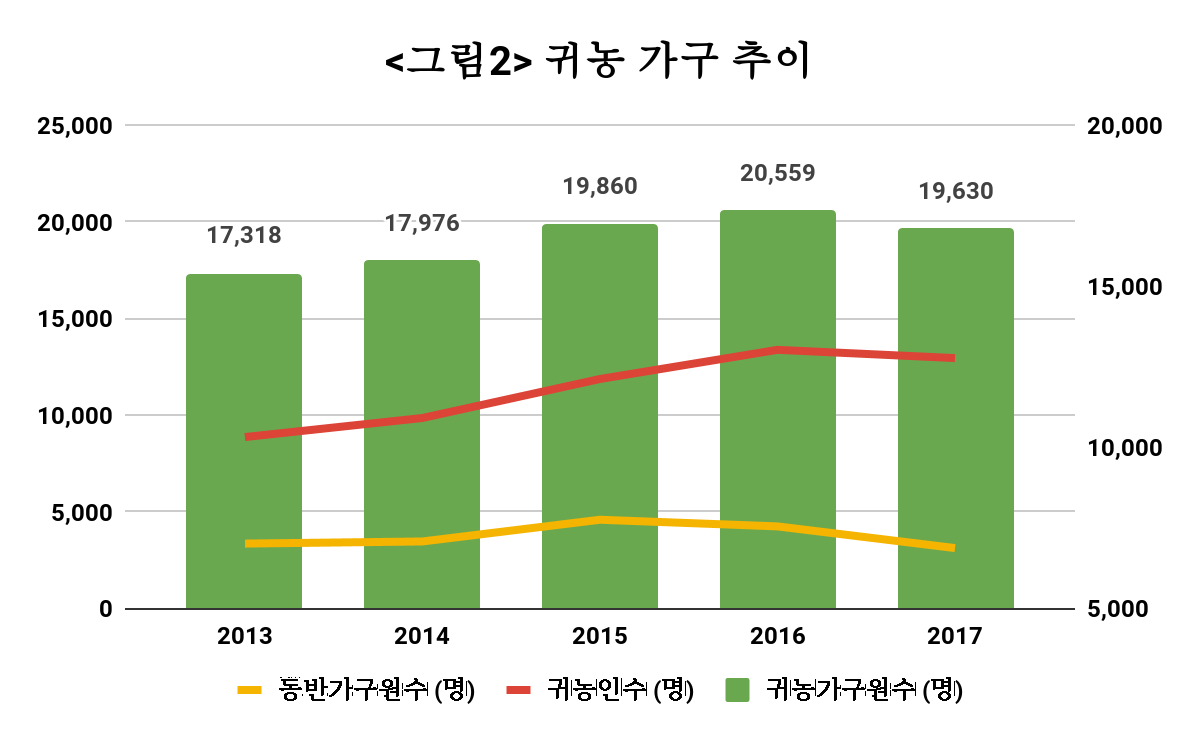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숨통을 죄어 오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사회인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었다. 누구도 고령화가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을 저해하는 큰 원인이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농촌 사회는 더욱이 심각하다. 아래 <그림1>과 같이 1999년에 65세 이상 비중이 21.1%라는 ‘초(超)고령 집단’이 되었고, 최근 2018년에는 44.7%의 농가 인구가 고령의 나이이다. 그에 따라 농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실질 농가 인구는 2018년 기준 231만 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4.5% 밖에 되지 않는다.

농촌 초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제지할 대안 중 하나로서 ‘귀농 및 귀촌’이 제안되었다. 그리하여 2015년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귀농어귀촌법)을 제정하였고, 귀농, 귀촌은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림2>와 같이 2013년부터 2017까지 꾸준히 1만 7천 명 이상의 귀농인구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귀농은 도시에서 떠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청년 귀농인은 중요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고시한 지자체 별 지원정책은 총 919건이다. 그 중 청년 정책은 134건이고 그 외 청년 정책이라 명시되지 않은 금전적 지원정책도 45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 지원정책이 많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시키고, 그에 따라 농촌 고령화 추세 완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정착 자금 주요 사용처(1순위 + 2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농지 구입 및 임대 | 주택마련 | 영농시설 자재구입 | 생활비 | 농작물 재배 및 가출 사육 | 기타 |
| 귀농 | 65.4 | 61.1 | 31.1 | 22.2 | 9.2 | 3.1 |
| 귀촌 | 37.9 | 81.9 | 6.3 | 49.3 | 2.8 | 6.1 |

<표 2> 연령대별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영농기술/ 경험 부족 | 농지 및 시설 투자시 자금 부족 | 재배품목의 판로 부족 |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량) | 운영비 부족 | 재배품목의 높은 가격 변동성 | 기타 |
| 귀농 | 30대 이하 | 33.4 | 33.2 | 9.2 | 5.9 | 11.5 | 6.8 | 0.0 |
| 40대 | 23.8 | 43.1 | 14.6 | 9.2 | 3.1 | 2.2 | 3.6 |
| 50대 | 35.2 | 31.0 | 10.5 | 4.6 | 5.9 | 4.3 | 8.5 |
| 60대 | 44.5 | 21.0 | 11.7 | 9.4 | 6.0 | 1.6 | 5.9 |
| 70대 이상 | 35.7 | 13.3 | 7.1 | 25.7 | 7.4 | 3.1 | 7.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귀농인은 정착 자금과 경제소득에서 커다란 장벽을 느끼고 있다. <표 1>과 같이 귀농인들은 초기 정착 시 농지 구입 및 임대에 65.4%, 주택마련에 61.1%를 사용하고 있다. 귀농, 귀촌 정착 자금은 평균 1억 7,7703만원이며, 대부분 저축액이나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30대 이하 귀농인의 평균 정착금은 7,680만원이고 60.4%의 30대 이하 귀농인은 정착자금이 1억원 이하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착자금의 규모도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표 2>에 따르면 자금 부족으로 농지 및 시설에 투자하지 못하는 30대 이하는 33.2%, 40대는 43.1% 이다. 또한 귀농 가구의 첫 해 평균 소득은 1,782만원으로 귀농직전 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귀농 후 3~4년까지 겨우 귀농 직전 소득의 50% 수준으로 회복된다.

<표 3>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30 대 이하 | 40 대 | 50 대 | 60 대 | 70 대 이상 |
| 귀농가구원수 (명) | 4,983 | 3,148 | 6,238 | 3,678 | 1,022 |
| 귀농인 수 (명) | 1,026 | 1,975 | 3,913 | 2,381 | 557 |
| 동반가구원 수 (명) | 3,751 | 779 | 1,543 | 821 | 353 |
| 귀농인당 동반가구원 | 3.7 | 0.4 | 0.4 | 0.3 | 0.6 |

<표 3>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140개 지역의 귀농인의 연령별 통계이다. 전국 귀농인 데이터를 연령대별 귀농인과 동반 가구원으로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에서 귀농인당 동반 가구원 수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경우가 주라고 판단된다. 2017 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유자녀 가구(동거하는 18세 이하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71만 6천원으로 무자녀 가구(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의 소비 지출 230만 1천원에 비해 1.6배 이상 높다. 따라서, 2017년 기준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 32.7세이므로 30대 중반에서 40대에 걸칠 미성년자녀 동반 가정을 고려하여 40대 이하를 젊은 귀농인의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귀농인을 유입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다음 <표 4> 에서 의미하는 전국이란 신규 귀농인의 유입이 관찰된 140 여개 지역을 아울러 의미한다.

<표 4> Ranking System 분류 기준

|  |  |  |
| --- | --- | --- |
| 구분 | | 분류 내용 |
| Ranking System | 신규 귀농인 대비 기존 농가 인구 | 연도별로 지역별 신규 귀농인 수를 농가 인구 수로 나누어 유입 대비 기존 인구 비율 조사  해당년도의 전 지역 평균과 대비하여 scoring (+, -)  지역별로 5년간의 score를 합하여 Rank구분 |
| Rank 0: 5년간 연도별 전국 귀농인구비율 평균에 비해 높은 추세 유지 |
| Rank 5: 5년간 연도별 전국 귀농인구비율 평균에 비해 낮은 추세 유지 |
| 절대 인구 필터 (귀농인구 평균) | 통합 선호지역: Rank 0 지역 중 5년 간의 귀농인구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개 시/군/구 |
| 통합 비선호지역: Rank 5 지역 중 5년 간의 귀농인구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개 시/군/구 |

{{ 여기다가 랭킹 시스템 지역 넣어야함 }}

|  |  |  |  |  |
| --- | --- | --- | --- | --- |
| 구분 | 평균 공시지가 (단위: 원/평) | | 도시 면적 비율 (단위: %) | |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 통합 | 3,771 | 11,141 | 4.275 | 20.411 |
| W = 7, p-value = .000 | | W = 11, p-value = .000 | |
| 40 대 이하 | 9,772 | 6,245 | 20.038 | 5.818 |
| W = 148, p-value = .149 | | W = 175, p-value = .009 | |
| 50 대 이상 | 4,450 | 8,230 | 3.125 | 11.346 |
| W = 65, p-value = .050 | | W = 39, p-value = .002 | |

95 %의 신뢰구간에서 2013 ~ 2017, 5년간의 지역별 평균은 비선호지역의 공시지가가 선호지역에 비해 약 3.0 배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도시 면적 비율 또한 선호지역의 약 4.7배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지가’ 가 귀농인이 지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임을 뒷받침한다. 또한 전 지역의 도시면적 비율과 평당 평균 공시지가를 Spearman’s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시 면적 비율과 지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들의 상관계수는 0.721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모수 검정의 95% 신뢰구간에 따라 40대 이하 귀농인의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의 평당 평균 공시지가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도시면적 비율의 경우, 선호지역의 평균이 비 선호지역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통합 귀농인구의 분석 뿐 아니라, 50대 이상 귀농인구 한정 분석과도 상반된다. 따라서 40대 이하 귀농인의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의 ‘지가’ 의 평균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p-value = 0.149 > 0.05) 는 점은 40대 이하 신규 귀농인이, (또는 귀농 예정자가) 정착 하고자 하는 지역을 결정시에 ‘지가’ 보다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타 요인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교육 시설 (개소/천 명당) | | | | 의료 시설 (개소/ 만 명당) | | | |
| 학교 | | 사설학원 | | 종합 및 기타 병의원 | | 보건소 | |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 통합 | 10.419 | 4.067 | 0.840 | 1.527 | 8.372 | 10.157 | 4.671 | 1.470 |
| W = 191, p-value = .000 | | W = 23, p-value = .000 | | W = 46, p-value = .017 | | W = 185, p-value = .000 | |
| 40 대 이하 | 6.448 | 9.294 | 1.275 | 0.873 | 10.391 | 8.944 | 2.838 | 3.952 |
| W = 57, p-value = .021 | | W = 167.5, p-value = .024 | | W = 161, p-value = .045 | | W = 76, p-value = .137 | |
| 50대 | 9.68 | 7.003 | 0.845 | 1.124 | 8.964 | 10.196 | 4.371 | 3.262 |
| W = 170, p-value = .016 | | W = 67, p-value = .061 | | W = 79, p-value = .174 | | W = 150, p-value = .1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주거 시설 | | | | 기타 | | | |
| 아파트 | | 단독주택 | |  | | 근대적 유통시설 | |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선호 | 비선호 |
| 통합 | 273.267 | 1794.769 | 10296.54 | 7116.8 |  |  | 0.167 | 1.69 |
| W = 1, p-value = .000 | | W = 12, p-value = .000 | |  | | W = 8, p-value = .000 | |
| 40 대 이하 | 1145.333 | 364.4 | 8754.267 | 7789.267 |  |  | 1.36 | 0.387 |
| W = 182, p-value = .003 | | W = 157, p-value = .068 | |  | | W = 151, p-value = .041 | |
| 50대 | 307.133 | 930.067 | 7435 | 9055.733 |  |  | 0.523 | 1.550 |
| W = 46, p-value = .005 | | W = 53, p-value = .013 | |  | | W = 67, p-value = .086 | |

<표 5> 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40대 이하의 귀농인들의 지역 선정에 영향을 가지는지 교육 시설, 의료 시설, 주거 시설 및 기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기입하였다. 비모수 검정의 95 % 신뢰구간에 따르면, 40 대 이하의 귀농인구의 선호 및 비선호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50 대 이상과 전체 귀농인구의 선호 및 비선호 지역적 특성과 상반되는 추이이다.

{{ 주거시설 관련 자료 + 설명 }}

이러한 젊은 귀농인들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몇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은 3년간 월 100 ~ 80 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세대당 3억원 한도(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로 저금리 신용 및 담보 대출 혜택을 주고 있다. 농림 축산 식품부가 주관하는 대다수의 도시 재생 사업은 기존 농가의 공동체 형성과 보수를 위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농촌의 잠재력과 고유함을 살려 특성과 졍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또한, 최초의 귀농귀촌 단지형 임대 및 분양주택 공급사업인 리츠사업은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건설과 분양 및 임대를 해주고 있다.

|  |  |  |
| --- | --- | --- |
| 청년 귀농 지원 사업 | 도시재생 사업 | 리츠/LH 사업 |
| 청년농업인턴제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귀농귀촌 주택 리츠 사업 \*리츠(Reits): 토지매입,  주택 건설 및 분양 \*LH : 사업관리 |
| 영농정착지원금 | 일반농산어촌개발 |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금 | 창조마을조성사업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농어촌정비사업 |

그러나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현실적인 진입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한 사업이다.

첫째, 귀농인 평균 초기 정착금(1억,